

보도자료

2014년 4월 24일(목) 배포 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안건]

가.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박동주 과장(1460) 나. 의안조정팀 최현숙 팀장(1380)

[보고 사항]

가. 김재홍 상임위원실 비서관(1223)

나.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 열 과장(1520)

다. 정보보안팀 박준선 팀장(1360)

라. 편성평가정책과 곽진희 과장(1280)

2014년 제 15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사항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14.4.13)에 따라 방송, 경영·경제,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총 9인을 제2기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동의함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총 9인) >

구 분	성 명	성 별	현 직	비 고
위원장	정윤식	남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임
위 원	전영섭	남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택	남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변상규	남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	
	박주연	여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영주	여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임
	박종성	남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윤경	여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 법정위원회 보결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 정회 중

[보고안건]

가. 디지털문화 향상과 인터넷윤리 교육의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첨부 1참조)

- 세월호 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디지털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 SNS 모범 사례 포상 방안 등을 보고함

나.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추진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첨부 2참조)

- 최근 금융사, 이통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추진현황 및 대책을 보고함
-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중이며 범정부 TF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임

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첨부 3참조)

-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방통위의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향후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수습에 도움될 수 있도록 수습지원 체계를 확립할 예정임을 보고함

라.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 정회 중

<첨부1>

□ 시행 방안

가. 세월호 사고 관련 SNS활동을 초중고 인터넷윤리 학습 자료집에
교훈사례로 비중높게 수록

-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초중고 인터넷윤리 교수학습 자료집
작성 때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SNS 활동을 중요한 교훈사례로
수록할 계획을 예고.
- 근거없는 왜곡과 악의적인 비방으로 지탄받는 SNS 활동을 벌인 개인
이나 그룹, 그 내용을 교육자료에 수록.
- 긍정적인 활동으로 누리꾼과 시민사회의 호응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SNS 활동의 모범으로 제시.
-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 안팎의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공교육 교과과정에
인터넷윤리를 필수 또는 권장 과목으로 비중을 높이도록 추진.
-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자녀교육과 함께 평생학습을 겸해서 인터넷
디지털문화에 관심을 높이도록 권장.

나. 국가적 재난시 SNS를 통해 협동·격려·위로하는 공동체정신의 확산에
공헌한 활동을 포상하는 계획 발표

- 공동체가 재난을 겪을 때 서로 협동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같은 SNS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의미가 있는 포상을 시행.
-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SNS 활동에 대해 5월 말까지 공모하거나 자체
선정하여 오는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아인세) 행사에서 시상.

- 수상자들을 방통위가 주관하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강사로 초빙하여 활용.
- 방송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시행계획의 의미와 효과를 제고.

□ 기대 효과

- 세월호 사고 이후 인터넷윤리에 대한 국민여론층의 우려가 고조돼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책사업을 전개할 경우 큰 호응이 기대됨.
- 방통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인터넷윤리 교육을 크게 지원하고 홍보할 경우 성인의 인터넷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들도 각기 소관 영역에서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연쇄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음.
- 계획을 시행한 후 그 결과와 영향에 대해 측정하는 방법을 대폭 개선.

<첨부2>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추진 현황 및 대책

1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KT》

- (추진현황)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 981만여건(이름·주민번호·신용카드번호·카드유효기간 등 12개 항목)을 확인
 -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조사
- (향후계획) 조사 결과 및 제재 방향에 대해 위원회 의결 예정('14.5월)

< 관련 규정 >

- 기술적 조치 미비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술적 조치 미비와 개인정보 유출간 인과관계 입증시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제3자 제공 규정 위반 :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 가능

《통신사 영업점》

- (추진현황) 3.17~3.28, 약 5만개 영업점 중 SKT·KT·LGU+·SK브로드밴드 33개 영업점(개통건수 상위)의 고객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 완료
 - 개인정보 보관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여부, 보관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등에 대해 조사
- (향후계획) 조사 결과 및 제재 방향에 대해 위원회 의결 예정('14.6월)
 - 아울러, 영업점 전반에 대한 연중 조사 일정 수립, 방통위·이통사·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영업점의 개인정보보호 지원 방안 마련

《주민번호 파기 후속조치》

- **(추진배경)**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12.8.18 이후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14.8.17까지 既 수집한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파기 필요
- **(추진현황)** 주민번호 파기 매뉴얼·솔루션 배포, 홍보·컨설팅 등을 추진
 - 중소 사업자(주민번호 수집사이트 약 15만개 중 약 3만 6천개)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파기 지원 중(금년 9천개 목표)
- **(향후계획)** 법 시행에 앞서 주민번호 파기 현황 전반을 점검하며 독려, 하반기에 131개 대형 사업자(일방문자 10만명 이상) 위주 우선적으로 조사

《기타 취약 분야》

- **(주요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게임사(방문자수 상위업체 중 온라인 점검결과 기준)에 대해 조사 완료, 제재 방향에 대해 위원회 의결 예정('14.6월)
 - 향후 포털·이통사('14.4~6월), 모바일 앱(다운로드 수 상위) 등 다수의 개인 정보 보유 사업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 이용자 未동의시 서비스 제공 거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
- **(유출 신고 및 검·경 통보)** 방통위에 유출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 및 검·경에서 통보한 사업자에 대해 조사 추진('14.5~6월)

2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 **(처벌 강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하여 사업자 책임 강화

현 행		개 정
○ 보호조치 위반과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과징금 부과	⇒	○ 보호조치 위반과 침해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
○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관련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14. 6월 국회 제출 예정)

- **(보관기간 단축)**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단축(3년 → 1~2년)
- **(암호화 대상 확대)**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에서 운전면허,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까지 확대
- **(수집·이용·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범위에 대해 협회와 공동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
 - **(대상 업종)**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통신사(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온라인 포털·쇼핑몰·소셜커머스·게임 등
 - **(주요 내용)** 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②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엄격한 분리, ③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고딕체, 빨간색 등)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마련 등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 추진일정 >

구 분	추진 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① 법령 위반 처벌 강화	법률 개정				
② 개인정보 보관기간 단축	시행령 개정				
③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고시 개정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공통사항				
	방송·통신				
	포털·쇼핑몰				
	게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추진현황)** 전문가 연구반(‘13.7~9월)을 거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1차 토론회(‘13.12.18), 시민단체 협의 등을 거쳐 2차 토론회(‘14.3.19) 개최
- **(주요쟁점)**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한 사전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 검토
- **(향후계획)** 전문가 검토,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미래부·개인정보보호위 등) 협의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안) 위원회 보고 및 시행(‘14.6월)

③ 개인정보보호 관련 범정부 TF 주요 논의사항

- (주요성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1.26)에서 기본방향을 결정, 국조실장 주재 범정부 TF를 구성(2.7)·운영하여 분야별 대책 검토
 - 현재까지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부문 점검, 법·제도 개선 등을 검토, 산하에 운영(국조실)·제도개선(안행부)·기술(미래부) 등 3개 분과 구성·운영
- (주요내용) 법제 정비, 컨트롤타워 강화, 피해자 구제 강화 등 논의
 - 법제 정비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간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 하고,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정비
 - ※ 정비 방향 : 망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현행 개인정보법상 안행부 장관 단독 권한사항을 방통위·금융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 컨트롤타워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방안 등 검토
 - 피해자 구제 강화 :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와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
 - ※ 국회 미방위는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법안소위 심의 완료(‘14.2월)
- (향후계획) 각 상임위 계류 법안에 대한 정부입장 정리, 부처별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대책」 발표 예정(‘14.6월)

<첨부3>

□ 사고 개요

‘14.4.16(수) 08:55경,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항해중이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병풍도 북방 1.5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여 구조·수색 진행중

- 해양수산부 주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중 (진도군청 2층)
 - ※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해수부, 안행부 등 10개 부처 위원으로 구성

□ 추진경과

- ‘세월호’관련 재난방송 요청 (4.16)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재난방송 의무)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재난방송 준칙 준수,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방송 실시 요청
- ‘세월호’관련 상처를 주는 보도와 게시물 자제 당부 (4.18.)
 - 방송사에 재난방송 준칙(고시)에 따라 선정보도 자제 당부
- ‘세월호’관련 포털사에 협조 요청 (4.18.)
 - 포털사에 유가족에 상처 주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요청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수습지원 인력 파견 (4.19)
 - 여객선 침몰사고 수습지원을 위해 연락관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파견
- ‘세월호’관련 선정방송 자제 등 협조 요청 (4.22.)
 - 방송사에 한국기자협회의 『‘세월호’참사 보도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및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전달 당부

○ 『재난방송협의회*』 긴급안전 상정 요청 (4.22.)

- '세월호' 사고 수습 및 구조 관련 방송사의 선정방송 자제 등 협조 권고(안전 상정 요청)

* 국조실, 방통위, 미래부, 안행부,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15인으로 구성

○ 한국방송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4.23.)

- '세월호' 사고 재난방송 관련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배려와 선정적 보도 자제 등 당부

□ 사고수습 지원 상황실 운영

- '세월호' 관련 방송사의 재난보도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위원회 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고수습 지원 상황실 운영

- 일시 : 2014.4.22.~상황 종료시 까지 (일일 09:00~24:00 까지)

- 장소 : 지하 1층 상황실

- 재난 상황반 편성 (재난상황반장 등 6명)

- 주요 임무

-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상황총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사업자 등 협조체계 유지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위원회 파견자 업무지원 등